

안정적 생산활동 위해 사육의지 북돋아줘야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겪어보지 못했던 사태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 사태로 인해 그동안 낙농 및 유가공업계가 겪어 보지 못하였던 사태를 겪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전체의 목장들이 폐쇄 되고, 해당목장의 모든 젖소가 매몰 처분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 경계지역 등으로 원유의 폐기, 시유생산금지과 분유생산, 이동제한 등 모든 것이 일시에 발생되어 낙농 및 유가공업계는 그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유의 자급률 지속적 감소

그동안 우유의 자급률은 평균 80% 정도는 유지하였다. 과거 10년 전부터 우유 수급사항을 보면 2000년 원유생산은 2,253천 톤 우유소비량은 2,803천 톤으로 자급률은 80.3%, 2010년 현재를 보면 원유생산량은 2,070천 톤, 우유소비량은 3,150천 톤으로 자급률은 약 70%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10% 이상 자급률이 떨어졌다. 갈수록 전체 우유의 소비량을 늘어나는데, 국내 우유의 생산량은 감소되어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구제역 사태로 자급률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정부에서는 올해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약 8% 수준으로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큰 걱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유수급이 1~2% 정도 또는 일시적인 기후변화, 위생과 관련되는 언론보도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 그해는 우유의 과잉 또는 부족사태를 여러 번 겪은 경험이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폭서, 태풍의 영향으로 젖소의 산유량이 감소됨에 따라 유가공업체는 원유의 부족을 자체 분유의 재고를 통해 어느 정도 부족량을 해소해왔다.

뼈아픈 경험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매물 농장수는 무려 638농가에서 36,400여 두가 매물 살처분 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전국 농가수 6,317가구 중 무려 10%에 해당하는 낙농가가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낙농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물 처분된 36,400여 두는 전국 사육 두수 429,547두의 8.5%에 해당하는 많은 젖소가 살처분 되는 안타까운 사태와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난 5개월 동안 겪었던 재난적 사태로 인하여 우유 부족사태를 안정화 하기 위하여는 최소2~3년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위축되어진 낙농산업 재건을 위하고, 낙농가의 사육의지를 북돋워줄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는 낙농진흥회의 쿼터를 연간쿼터총량제를 통하여 원유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으로 자체 집유 낙농가에게 한시적으로 쿼터해제 또는 기준 원유량 상향조정을 통하여 원유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등의 증산정책은 한시적인 대책이지만, 궁극적인 낙농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주어야 한다.

젖소 도입의 찬반여론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638 낙농가 36,400여 두의 젖소를 잃어버림에 따라 일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젖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물론 단시간에



젖소를 수입, 농가입식을 통하여 원유의 생산을 유도할 수가 있겠지만, 가임암소의 수입을 통하여 분만할 때 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 광우병 발생지역 제한, 수입지역 선정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입 국가를 선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다.

문제는 낙농가 간의 정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급히 젖소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부에서는 젖소나눔운동도 전개 되고 있는데 구제역 사태로 인한 폐업 농가에 대하여 이러한 캠페인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

현재 국내 낙농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농하시는 분들이 낙농을 계속유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과 사육의지를 북돋아줄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낙농후계자 육성방안이 절실할 것으로 본다.

국내 낙농여건은 1995년 UR협상 이후 수입개방과 정부의 FTA 체결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원유소비량이 많은 치즈 등 유가공품의 시장잠식으로 국산우유의 소비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낙농가의 사육의지 약화로 낙농기반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속적인 낙농가수 감소 및 점유량 감소에 따른 낙농기반이 많이 약화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수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동안 구제역 파동이 몇 차례 있었지만, 낙농 및 유가공 분야에는 수급에 큰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일시에 전체 낙농가의 10%에 해당하

는 목장이 없어짐에 따라 낙농뿐만 아니라 유가공업계도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낙농가의 사육의지 약화와 낙농을 포기하는 목장,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앞으로의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낙농기반재건과 적정기반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낙농후계자 육성정책과 적정한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낙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낙농기반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목장과 영세한 목장 등 규모에 따라 생산비도 다르다. 우선적으로 원유의 생산비 절감 자구노력과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을 통한 산차수 증가, 단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 원유가격 이외의 직·간접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증대 방안이 없는지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도 낙농제도 개선을 통하여 FTA시대를 대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기반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따른 적정한 소득의 보장이며, 소득 보장이 바탕이 될 때 낙농후계자 육성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낙농산업재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낙농을 하고자 하는 후계자 육성지원 또는 더 이상 낙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육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낙농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졸업 후 희망할 경우 대학, 전문교육기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뒷받침하면서 낙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신규농을 꿈꾸는 이들이 새로이 낙농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낙농을 포기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낙농후계자 하기를 꺼려하는지, 적정한 소득보장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부차원에서 낙농후계자 육성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뿐만 아니라 낙농기반 육성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앞으로 낙농산업의 재건을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무조건 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낙농업계, 관련기관, 업계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